

Linder의 代表需要理論 側面에서 본 우리의 輸出마아케팅戰略

黃 海 斗

차

- | | |
|----------------------|-----------------------|
| I. 머리말 | V. 造船工業에 配分된 政策金融의 效果 |
| II. 外部指向的 工業化 政策의 效率 | VI. 輸出 마아케팅의 事例研究 |
| III. 現實의 問題와 相反된 見解量 | VII. 代表需要理論과 輸出마아케팅戰略 |
| IV. 貿易政策의 配分的 效率 | VIII. 結論 및 政策暗示 |

I. 머리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에 수립되고 실시되어 온 수출지향적 공업화 정책에 힘입어 지금 까지 괄목할만한 수출 및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1960년대 초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생산 및 판매계획을 해왔으며,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한 생산 및 판매계획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채택한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수출의 확대는 우리 경제에 고용의 확대와 소득의 증가 등과 같은 긍정적인 면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휴산업설비의 출현, 증가하는 추세의 무역적자⁽¹⁾, 그리고 증가하는 추세의 외채는 우리가 추구하여 온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과 기업들이 실시해 온 수출 마아케팅 전략에 무엇인가 시정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게 한다. 이 글은 급변하는 국제경제 여건하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선택하여 온 무역정책 및 수출 마아케팅 전략을 그대로 추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무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국가의 이익과 수출 기업의 채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²⁾ 지금까지 실시해온 정책과 다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만일 무역정책 및 수출 마아케팅 전략에 변화가 요구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변화가 필요한 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筆者：建國大學校 商經大學 助教授

(1) 3저 현상으로 인은 국제수지개선 효과는 단기 효과로 보고 제외함.

(2) 제 5장까지는 David Ricardo의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7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수출기업의 이윤이 증가되면 자본축적과 기술진보가 증가하여 국익이 증가한다고 가정함.

이 글은 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제 1장은 60년대 초의 무역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수출지원정책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우리의 무역정책이 경제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는 견해들의 공통분모를 추려본다. 제 2장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몇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가 실시해 온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들을 야기시키기에, 수출지향적 공업화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들의 반대 주장을 간단하게 서술하고, 강력한 수출 지원정책의 하나로서 사용되어온 정책금융의 보조금의 크기를 바르게 반영하지 아니하고서는, 무역정책의 올바른 평가가 어렵다는 것을 제기한다. 제 3장은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연구들에서, 왜 정책금융의 보조금의 크기가 과소평가 되었는가를 분석하고, 금융의 이용가능성과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타당하게 반영하여⁽³⁾ 집계적 수준에서 수출지원 정책의 배분적 효율을 추론한다.

제 4장은 정책금융의 효율성에 관한 사례 연구로서 1972년부터 1982년까지 수출전략 산업으로서 지정되었던 조선공업에 지원된 정책금융의 효과를 산업 및 회사별 수준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가를 평가하고, 만일 비합리적인 요인들이 있었다면 어떠한 것들이었는가를 분석한다. 제 5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마아케팅 전략이 대부분의 경우 왜 마아케팅의 중요한 개념의 하나인 ‘판매보다 이윤’이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다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하는 사례 연구로서, 조선기업들의 수출 마아케팅 전략을 정부의 무역 및 산업정책과 관련지어서 검토한다. 제 6장은 5장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정책 전환의 지표로서 린더(Linder)의 대표수요이론을⁽⁴⁾ 설명하고, 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1973년 이후에 대두된 신보호 무역주의, 자원민족주의와, 80년대의 불확실성이 높은 세계경기의 하강 국면에서 대체적인 무역 및 산업정책과 수출 마아케팅 전략을 연구한다. 제 7장은 이 글을 통해 얻은 일반적인 결론과 정책적 암시를 서술한다.

II. 外部指向的 工業化 政策의 效率

60년대 초에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선택가능한 두 가지 무역 정책은 ; (i) 중화학 공업과 같

(3) 공적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별적인 금융의 이용가능성과 사채시장의 활발성으로 말미암아 균형이 자율을 기준으로 정책금융의 보조금을 측정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말함. 제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함.

(4) Linder, B., *An Essay on Trade and Transformation*, John Wiley and Sons, 1961에서 무역은 산업 및 소득구조가 서로 비슷한 국가 사이에 일어난다고 보고, 한 국가의 소비나 소득 수준에 맞는 상품을 먼저 생산하고, 규모의 경제나 제품차별화에서 경쟁력이 있으면 수출하라고 하였음.

은 자본집약적인 수입대체를 추구하거나 ; 아니면 (ii) 내구제가 아닌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하느냐 이었다. 정책 입안자들은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수출지향적 공업화 정책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두 가지 주된 이유는 광범위한 수입대체정책의 비효율성과⁽⁵⁾ 미국 공적 원조의 급격한 감소이었다.⁽⁶⁾

한국 경제는 1961년과 1964년에 약 200%의 평가절하와 1965년에 있었던 공적 금융시장의 대출이자율을 낸리 14%에서 26%로 인상하는 내용의 이자율 개혁을 전환점으로 60년대 초까지의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으로부터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이 두 가지 주된 개혁외에 포괄적인 수출 지원 정책들이 소개되었다.

1965년 이후의 대부분의 산업확장이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한국은 아마도 외부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채용한 대표적인 예가 되리라고 여겨진다.⁽⁷⁾ 60년대에는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다고 믿어진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급속한 성장을 통해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70년대 초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산업정책을 경공업으로 부터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하였다 : (i) 해외 시장으로부터 단순한 노동집약적인 상품에 대하여 증가하는 추세의 보호주의 ; 그리고 (ii) 노동과 비교하여 빠른 속도의 자본 축적으로 인하여 한국이 비교적 단순한 노동집약적 공산품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부지향적 공업화 정책이 성공 하였다고 보는 주장은 크게 프랑크, 김광석, 그리고 웨스트필의 주장과⁽⁸⁾ 홍원탁 교수의 주장⁽⁹⁾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연구는 실효보호율을 사용하여, 무역 보호율이 낮고 원화가 과대 평가되지 아니 하였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수출지향적 정책 하에서 실시된 제반의 수출유인책들은 효율적으로 여겨진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한국은 국제경쟁에 자신을 보호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출과 총국민생산과 고용의 증대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후자의 연구는 핵서—오린의 비교우위 기준으로 본다면 수출지향적 공업화 정책을 채택한 이후에 생산요소의 이용도와 배분적 효율이

(5) 홍원탁, Krueger편집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KDI, 1975 중 김광석 교수의 '한국의 외부지향적 공업화 정책' 참조.

(6) 한국은 1961년 이후에 미국원조를 대체해야 할 외화를 필요로 하였음.

(7) 선진국들은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무역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우리는 반대로 하여왔다. 일본의 기계공업, 조선공업, 전자공업의 예를 보게 되면, 산업정책을 수립하여 국내시장의 수요를 거의 포화상태까지 충족시키고 나서, 기술회득과 전파(difussion)가 이루어지고 나서 규모경제의 이익을 살린 과감한 가격정책을 채택하여 해외시장을 확장하여 왔다.

(8) Frank, C., Kim, K. and Westphal, L., *Foreign Trade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South Korea*, NBER, 1975.

(9) Hong, W.,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K.D.I. Press, 1976.

증가하였다고 지적한다. 양자의 연구들은 한국 경제가 변화하는 비교우위를 쫓아갈 수 있도록 한 중립적인 수출유인책들을 강조하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다.⁽¹⁰⁾

바그와티, 크루이거, 그리고 발라사 같은 사람들도⁽¹¹⁾ 역시 우리의 수출지향적 공업화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도 가격 기구에 의존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외부지향적 공업화를 성공적으로 보는 견해들은 다음의 웨스트필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간추려 질 수 있다.

“한국은 비교우위를 그대로 담습함으로써 전통적 경제이론에 의해 제시되는 이익을 거둔 경제의 전형적인 예이다. 한국의 경험으로 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수출은 유인에 따라 반응했으며, 자원배분의 효율은 자유무역 국가에 가깝게 행동함으로써 확고하게 달성될 수 있었다.”⁽¹²⁾

웨스트필에 의하면 ‘자유무역 국가’는 수출 산업과 수입대체 산업들간에 가격의 왜곡이 거의 없거나, 아주 작다는 것을 뜻한다.

III. 現實의 問題와 相反된 見解들

대부분의 앞서의 연구들은 한국의 외부지향적 정책이 수출과 총국민소득을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의 무역적자는 61년의 2억불에서 70년의 9억불 그리고 80년에는 44억불로 증가하였다.⁽¹³⁾ 앞서의 연구들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들의 증가하는 차본재와 원자재의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무시했다. 62년부터 82년까지의 한국의 국제수지표를 관찰 해 보면 무역적자로 발생한 경상계정의 적자는 외국 차본의 주입으로 메꾸어져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82년 말에 외채 잔액은 당해 년도의 총국민생산액의 약 반을 차지하는 371억불이었다. 공산품의 총수출액 중 중화학공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64년의 9.1%에서 82년에는 41.5%로 증가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투자재원과 기술획득 면에서의 조정의 실패는 몇 개의 대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나 특화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국 관련된 기업들의

(10) 실효보호율의 값은 정책개입이 자원배분에 미치는 가격효과를 나타내고, 요소집약도 분석은 정책개입에 의해 초래된 요소이용도를 나타낸다. 두 분석방법은 정통적 비교우위(orthodox comparative advantage)의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배분적 효율을 평가한다.

(11) Bhagwati, J., *Foreign Trade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Anatomy and Consequences of Exchange Control Regime*, NBER, 1978.

Krueger, A., *Foreign Trade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Liberalisation Attempts and Consequences*, NBER, 1978.

Balassa, B., *Policy Reforms in Developing Countries*, Pergamon Press, 1977.

(12) Westphal, L., "The Republic of Korea's Experience of Export-led Industrial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Vol. 6, 1978, p.375.

(13) BOK, *Survey Tables of Balance of Payments*, 1981.

재무구조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¹⁴⁾

한국의 수출지향적 정책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하나는 1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과다하지 않고 중립적인 수출유인책 하에서 급속한 수출과 GNP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의 주장은 수출과 GNP의 빠른 성장은 과다한 수출 유인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후자의 주장은 과다한 수출유인책들이 요소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사적 편익과 공적 편익의 괴리를 초파보상 하므로써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악화 시켰다는 점을 지적한다.

만일 한국 경제가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다 중립적인 수출유인체제를 수립하고, 변화하는 비교우위를 그대로 쫓아서 자원배분을 했었더라면, 수출지향적 정책에 대한 상반된 견해들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서의 연구들의 방법들에 대한 의문점들이 제기된다. 즉 실효보호율이나 요소집약도와 같은 분석 방법은 아마도 정책금융이나, 수입 할당제(QRs)나, 가격통제와 같은 묵시적 내지 간접적 보조금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기에 그릇된 평가를 할 수도 있다.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다음의 세가지 요인에 힘입은 바가 크다. : (i) 높은 생산성과 낮은 수준의 노임을 가진 양질의 노동력 ; (ii) 수출에 관련된 산업에 대하여 정책금융의 배분을 통한 저이자의 자금 조달 ; 그리고 (iii) 국내의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만큼의 명목환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한 주기적인 평가절하이다. 주기적인 평가절하는 수출 경쟁력을 보충하기 위한 방편인 정책금융의 역할이, 국내의 높은 물가상승율로 인하여 통화공급에 제한이 가해질 때,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앞서의 연구들의 결함은 정책금융에 의하여 발생한 자본시장의 왜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 있다. 한국에서의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은 사채시장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사채시장의 대출이자율은 공적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 보다 높아서, 기업가가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게 되면 공적 금융기관에서 차입했을 경우에 비하여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앞서의 연구들은 생산요소시장이 거의 완전하다고 가정하였다. 웨스트필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생산요소시장의 왜곡이 거의 없기에 총판매에 대한 실효유인율의 값은 상대적 효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¹⁵⁾ 키싱은 정부의 개입으로 생산요소의 불완전성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요소가격을 바로 잡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부패한 정치인과 공무원

(14) 1980년 경제기획원 내부자료에 의하면 중화학공업부분의 평균조업도는 최대 조업도의 1/3이 안 된다고 함.

(15) Westphal, L., (1978), p. 371.

들을 격파한다고 하였다.⁽¹⁶⁾

그러나 한국에서는 생산요소시장의 불완전성을 직접 공격할 것을 허용하는 정책 분위기를 가진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이미 존재하는 생산요소의 불완전성을 과대 보상하는 저임금과 저자본 정책을 실시 해 왔기 때문이다. 사채시장으로 형성된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은 정부의 개입으로 다음과 같이 악화 되었다. : (i) 정부는 공적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을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일려고 균형이자율보다 낮게 정하고 ; (ii) 정책금융의 이자율을 일반금융의 이자율보다 훨씬 더 낮게 정하고 ; (iii) 수출기업 위주의 우선순위대로 정책 및 일반금융을 대출하고 ; 그리고 (iv) 공적 금융기관의 대출금중 정책금융의 비율을 늘려 나갔다. 그 결과 수출에 관련되지 않은 기업들은 많은 경우에 자금조달을 위하여 사채시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의미에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가져왔다. 정부의 개입은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가격과 양적인 면에서 악화 시켰다.

정책금융은 수출기업에게 자금의 이용과 이자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산업구조를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데 유효하였다. 정책금융의 배분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기업은 정책입안자들이 원하는 방향의 산업으로 움직여서 수출을 하는 대기업들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있어서 나쁘게 차별 대우를 받았다.

수출유인책과 정부개입으로 발생된 왜곡을 바르게 반영할 수 있어야만 외부지향적 정책의 평가가 타당해질 수 있다. 앞서의 연구들이 정부금융의 배분으로 야기된 왜곡을 과소 반영했기에,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무역 정책의 배분적 효율을 평가하고자 한다.

II. 貿易政策의 配分的 效率

바그와티와 크루이거의 주장인⁽¹⁷⁾, 수출지향적 정책이 수입대체적인 정책에 비하여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수출지향적 정책이 좀 더 종립적인 유인책을 채용한다는 가정을 그대로 받아들인意义上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실증적 자료들은, 수출 지향적 정책 하에서의 과다한 보조가 초래한 왜곡들이 수입대체적 정책 하에서의 과다한 보호로 말미암아 발생한 왜곡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을 전복

(16) Keesing, D., "Trade Policy for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353, August 1979, p. 151.

(17) Bhagwati, J. and Krueger, A., "Exchange Control, Liberalis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3, May 1973, pp. 419-27.

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바그와티와 크루이거는 중립적 유인정책은 수출지향적 정책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한국의 실증적 자료들은 수입대체정책으로부터 중립적 유인책으로 움직이는 것과, 수입대체정책으로부터 수출에 더 큰 유인을 주는 정책으로 움직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 준다.

여러 나라의 실증적 자료들은 산업경쟁력을 구비하는데, 수입대체정책보다 수출지향적 정책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없는 논쟁임을 보여준다.⁽¹⁸⁾ 그러므로, 산업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기술 획득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이라든가, 부(-)의 사회 수익을 보상하기 위한 임시적인 보호나 보조는, 이러한 산업이 장기적으로 정(+)의 사회적 수익을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정당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임시적 보호나 보조가, 예를 들어 규모 경제의 실현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 시킨다면, 수입대체 산업이나 수출 산업이나 모두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명목보호율이 최종재와 관련하여 보호 정도를 측정하는데 반하여, 실효보호율은 각 생산 단계에서 소요되는 투입물의 수익에 관련하여 보호 정도를 측정한다. 무역정책의 배분적 효율은 실효보호율에 의하여 측정된다. 즉 높은 실효보호율은 주어진 가정하에서 비효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웨스트필⁽¹⁹⁾ 등은 한국의 무역 및 산업 정책의 효율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실효보호율이나 실효유인율은 초과이윤이나 초과 손실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율이 낮다면, 그 낮은 율은 초과이윤이나 초과손실도 없는 경우이다. 한국에서의 낮은 유인율과 상대적으로 적은 괴리는⁽²⁰⁾ 한국의 경제 발전이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이 글은 정책금융의 왜곡을 타당하게 반영한 무역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투자에 대한 순사회 수익으로 보충된, 수정된 실효외환율을 사용한다.⁽²¹⁾ 실효외환율은 1불의 국제거래를 하는데 실제로 지불하거나 수취한 원화의 단위를 나타낸다. 수출에 대한 실효외환율은 공정외환율에다 보조금을 더해서 구하고, 수입에 대한 실효외환율은 공정외환율에다 수입보호액을 더해서 산출한다. 수정된 실효외환율은 바그와티가 사용하는 실효외환율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 (i) 정책금융의 보조금 효과를 바르게 반영하기 위하여 타당한 기준 이자율을 정하고 ; (ii) 정책금융의 범주에다가 직접 수출을 위하여 배분된

(18) Hwang, H.D., *Preferential Credit and Export Competitiveness*, D. Phil Thesis, University of Sussex, 1986 참조.

(19) Frank, C., Kim, K. and Westphal, L., *Ibid.*, p. 216, 1968년에 한국의 실효보호율은 약 10% 이었다. 그들은 추가적으로 상대적 요소집 약도의 부분 균형 분석을 사용하여 효율을 평가했다.

(20) 괴리는 실효보호율이나 실효유인이 수출과 수입대체간에, 그리고 산업 간의 괴리를 뜻한다.

(21) 필자에 의하여 정책금융의 보조금 효과를 타당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도 되었음.

수출금융외에, 시설자금으로 배분된 정책금융이나 외자를 포함시킨다.⁽²²⁾

자본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수정된 실효의환율이 앞서의 연구들이 사용한 실효 보호율보다 우리의 무역정책을 평가하기에 더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수정된 실효의환율(SMEER)⁽²³⁾은 교역재의 측정하기 어려운 세계물가(world price)를 피할 수 있다.

(ii) 수출금융이 부가가치의 값보다는 최종산출액을 기준으로 배분되었기 때문에, SMEER는 실효보호율 보다 정책금융의 효과를 타당하게 반영할 수 있다.

(iii) SMEER은 실효보호율과 같이 고정된 비용의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iv) SMEER는 실효보호율과 같이 일정 시점의 분석(snap-shot)이 아니다. 왜냐하면 SMEER의 구성요소는 일정기간 동안의 유량(flow)이기 때문이다.

(v) SMEER는 그 자체가 순수한 단위당의 수치이기에 양적 조정(quantity weighting)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효보호율은 국내와 외국의 생산가능곡선의 괴리를 먼저 계산해내고, 그 다음에 양적 조정을 해야만 한다.

(vi) 전체적인 수준과 특정산업에서의 수출에 대한 SMEER와 수입에 대한 SMEER의 비율은, 특정 산업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무역 및 산업정책의 편파적인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제 4 장에서 정책금융의 동태적 효율 분석에 이용될 수 있다.

(vii) SMEER는 실효보호율보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이용해서 산출하기가 용이하다.

수출에 대한 SMEER는 정책금융의 왜곡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첫째는 정책금융의 범주에 수출에 직접 지원된 수출금융외에, 수출전략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에 지원된 정책금융이나 외자도 수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기자본의 비율이 약하고, 공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책금융이나 외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출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이다(Fungibility of Credit). 둘째의 수정은 정책금융의 보조금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자율로 가중된 평균이자율과 사채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이다. 앞서의 연구들이 일반대출 이자율을 기준으로 정책금융의 대출 이자율과의 차이를 보조금으로 계산한 것은, 사채시장의 활발한 존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SMEER는 공적 금융시장과 사채시장의 상대적 크기를 반영한 가중된 평균이

(22) 예를 들면, 조선공업의 경우 연불금융만이 아니고, 시설자금으로 제공된 정책금융이나, 정부의 지불보증을 얻어 종합상사의 해외지사를 통해서 얻은 외자는, 결국 수출액의 증대와 수출을 증가하기 위하여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크게 보아서 정책금융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23) 앞으로 Suitably Modified Effective Exchange Rate를 SMEER로 줄여서 부르기로 한다.

차율을 써서도 구하고⁽²⁴⁾, 사채이자율을 써서도 산출한다. 그러지만 사채 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가장 타당한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i) 수출기업들은 공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양적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균형이자율은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 공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균등한 이용 가능성이 있을 때에야 균형이자율이 기준으로서 타당하다.

(ii) 상업금융(commercial banking)이 아닌 개발금융(development banking)인 특성 때문에 공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대한 수요는 이자율에 대하여 비교적 비탄력적이다.

(iii) 사채는 정책금융이 이용가능 하지 아니할 경우 대체적인 자금조달 방법이다.

(iv) 수출금융은 인플레이션적 적자 재정조달 방법으로, 화폐의 발행에 의하여 지원되어 왔다. 즉 수출금융은 가계에 대한 조세로 볼 수 있다. 만일 수출금융이 없어진다면, 이러한 조세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자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사채 이자율의 상승을 초래한다.

위의 두가지 방법으로 산출된 정책금융의 보조금이 총수출보조금에 대한 비율은 <도표 3-1>에 실려 있다. 그리고 수출과 수입에 대한 SMEER는 <도표 3-2>에 실려 있다.

앞서의 연구인 웨스트필과 남종현 교수⁽²⁵⁾와의 비교를 위해 그들이 산출한 수치도 위의

<도표 3-1> 정책금융의 상대적 중요성의 비교

(단위 : %)

년 도	Westphal	남 종 현	황 해 두(A)	황 해 두(B)
1966	20.0	9.0	45.1	27.9
1967	23.6	13.5	63.4	50.7
1968	19.6	17.1	58.6	46.1
1969	18.4	16.9	58.0	44.5
1970	19.6	18.2	56.9	44.1
1971	17.6	17.3	53.5	41.0
1972	10.1	11.4	49.1	34.3
1973	7.9	8.9	49.5	27.7
1974	10.0	8.4	57.5	32.2
1975	15.9	13.1	62.2	39.4
1976	—	14.7	61.4	37.9
1977	—	8.9	52.4	28.6
1978	—	13.1	62.3	40.0

주석) i) (A)는 사채시장의 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고, (B)는 공적 금융기관과 사채 시장의 대출 잔액을 가중치로 하여 산출된 평균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ii) —는 자료가 이용 불가능한 경우임.

(24) 1972년 긴급조치 때의 자료를 이용해서 구했음.

(25) Nam, C., 'Trade and Industrial Policy in Korea', in Hong, W. and Krause, L. eds., *Trade and Growth of th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acific Basin*, KDI, 1981.

〈도표 3-2〉 수출과 수입에 대한 SMEER와 EER비율의 비교 (단위 : 비율)

년 도	Westphal	남 종 현	황 해 두(A)	황 해 두(B)
1966	1.12	1.07	1.17	1.11
1967	1.12	1.09	1.38	1.26
1968	1.17	1.18	1.45	1.32
1969	1.17	1.19	1.45	1.32
1970	1.18	1.20	1.44	1.35
1971	1.02	1.23	1.46	1.35
1972	1.20	1.21	1.40	1.30
1973	1.18	1.18	1.37	1.25
1974	1.16	1.16	1.39	1.23
1975	1.10	1.10	1.30	1.17
1976	—	1.10	1.30	1.16
1977	—	1.14	1.32	1.19
1978	—	1.08	1.29	1.15

주석) i) (A)는 사채이자율을 기준으로, (B)는 가중된 평균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출된 값이다.
ii) —는 자료가 이용 불가능한 경우임.

도표에 나타냈다.

〈도표 3-1〉은 앞서의 연구들이 정책금융의 보조금의 크기를 과소 평가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표 3-2〉는 수출에 대한 SMEER와 수입에 대한 SMEER의 비율은 단위치(unity)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i) 국내시장을 위한 생산은 해외시장을 위한 생산에 비하여 무역 및 산업정책에서 불리하게 대우 받았다는 것이고; (ii) 수출산업에 제공된 유인책들은, 유치산업의 경우와 같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경우가 없었다면,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무역 및 산업정책은 비효율적이라고 추론된다.

수출에 대한 상당히 큰 편파적인 지원의 주된 원인은 정책금융이었다. 만일 정책금융이 잠재적 국제경쟁력(Potential Competitive Advantage)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되지 않았다면, 수출에 대한 큰 유효의환율과 상대적으로 작은 수입에 대한 유효의환율은, 원자재를 수입하여 단순히 조립해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 발전을 유인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가들은 단순히 수출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판매한 수출유인책으로부터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업가들은 부가가치액이나 수출품에서 차지하는 수입품의 비중은 고려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공적 금융기관의 총 대출액 중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해 온 경향은 시장기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쟁적 압력이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약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정책금융이 잠재적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해 가기 위하여 배분되지 아

니 하였다면, 정책금융의 배분은 시장기구의 경쟁적 압력을 감소 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지원배분을 하게 된다. 경쟁적 압력이 없어진다면, 가격기구는 잠재적 승리자나 패배자를 선별하지 못하게 되고, 숨페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창조적 파괴의 끊임없는 돌풍으로 비효율적인 기업을 산업으로부터 도태 시킬 수 있게 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출에 대한 편파적인 무역정책이 정당화되는 경우들을 집계적 수준에서는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에 대한 SMEER의 비율은 집계적 수준에서 배분적 효율을 평가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 (i) 집계적 수준에서 유치산업의 경우가 있는지 알기 어렵고 ; (ii) 외국의 왜곡(distortions)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 그리고 (iii) 특정 산업을 편파적으로 지원한 것은 집계적 수준에서 평균화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책금융의 배분이 중립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의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즉 우리의 정책금융이 얼마만큼 우리의 경쟁자들이 지원하는 것을 보상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 수준에서의 수출과 수입에 대한 SMEER의 비율과 생산과 판매에 관한 회사별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위에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SMEER를 이용한 특정 산업에 배분된 정책금융의 배분적 효율분석은 정책금융의 순사회수익을 측정함으로써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 장은 SMEER와 순사회수익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조선공업에 지원된 정책금융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V. 造船工業에 配分된 政策金融의 效果

1972년 이전까지 조선공업이 발달되지 못한 주된 원인은 정부로 부터의 충분하지 못한 재정적 지원과, 철강과 해운 엔진과 같은 관련된 산업들이 발달되지 못한 것과, 부품산업들의 기술획득 및 기술전파의 낮은 수준 때문이었다. 정부가 지정한 면방직이나 비료와 같은 산업과 비교하여, 조선공업은 공적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있어서 이용가능성과 이자면에서 불리하게 대우를 받아왔다. 투자의 위험을 분산하고, 특화된 생산을 하기 위하여, 관련된 산업들과의 수직적 관계를 조직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1973년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선공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 (i) 한국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하여 저렴한 노임의 숙련된 노동력이 풍부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인 조선공업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봄 ; (ii) 3차 5개년계획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산업구조를 경공업으로부터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하려고 함 ; (iii) 선진국들의 조선공업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생산능력과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유치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함 ; (iv) 조선공

업의 육성은 산업연관 효과를 통하여 관련된 산업의 발달을 가져 온다고 봄; 그리고 (v) 노동집약적인 특성에 비추어 큰 고용효과를 가져 온다고 보았음.

조선공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1973년에 현대중공업을 지원하면서부터 본격화 되었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고정 및 유동자본을 위한 정책금융의 배분; 산업은행을 통한 주식에 의한 투자; 세금감면 및 면제; 수출에 쓰이는 철강판과 같은 중간재의 공장도 가격 통제; 그리고 가속감가상각 등이다.

조선공업은 규모 경제의 실현과 기술획득을 위하여 비교적 긴 회임기간이 요구되기에, 초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정책금융이 조선공업 발달 초기단계에 요구되는 많은 투자 자금을 조달했기에, 제반의 지원책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70년대의 년 15% 정도의 높은 물가상승율과 공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제약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낮은 이자율인 정책금융의 집중적지원은 조선공업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

조선공업에 배분된 정책금융은 연불 금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량적으로 운영되었다. 정부는 경통적 비교우위론, 정치적 유치산업론을 바탕으로 양적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을 위주로 하는 몇 개의 큰 조선회사만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정책금융은 규모경제의 실현이나, 기술의 획득 및 전파에 쓰여지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경우 큰 조선회사의 생산시설의 확장에 사용되었다. 1981년에 4개의 큰 조선회사의 조선시설은 한국의 총조선시설의 91%를 차지했다.

세계의 조선시설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3년의 0.8%에서 1979년에는 5.5%로 증가했다. 1981년에 한국은 산출고에서 일본 다음으로 세계 2위에 오르게 되었다.

조선공업에서의 수출에 대한 SMEER와 수입에 대한 SMEER의 비율은 1962년부터 1972년까지는 1.13이고, 1973년부터 1982년까지는 1.66이다.⁽²⁶⁾ 1973년 이후 SMEER 비율이 단위치(unity)로부터 상당히 벗어난 사실이 뜻하는 것은 정부가 조선공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집중적 지원을 하였음을 시사한다. 4개의 대형 조선회사들은 주로 수출활동에 종사하였기에 집중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중소기업들은 아주 미흡한 지원을 받았다.

수출과 수입에 대한 SMEER 비율이 단위치로 부터의 괴리는, 이러한 괴리를 정당화 할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면 정책금융의 배분이 비효율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편파적인 수출지원책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의 왜곡을 상쇄하거나, 국내시장의 판매에 비하여 해외시장의 판매로 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합리성은 기업 별로 생산과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므로 제 5 장으로 미룬다.

(26) Hwang, H.D., *Op. cit.*, 6장 참조.

조선 산업의 수출이 다른 제조업과 비교하여 얼마만큼의 편파적인 지원을 받았는가는, 조선 산업의 수출과 수입에 대한 SMEER의 비율을 집계적 수준에서의 수출과 수입에 대한 SMEER의 비율로 나누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선공업의 수출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은, 4개의 대형 선박회사에 집중적으로 정책 금융을 배분한 결과이다. 조선공업의 수출을 위한 정책 금융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조선공업이 잠재적 국제 경쟁력을 가졌는지 여부를 판별하고, 사후적으로는 순사회수익을 계산하여 이를 전체 제조업의 평균 순사회수익과 비교하고자 한다.

정부는 정통적 비교우위론에 따라서 조선공업을 73년부터 육성하였다. 그러나 생산요소 집약도와 같은 정통적 비교우위론은 한 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파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산업을 전문화하여 생산하는 비교우위의 서열은 2효소, 2상품과 2국가 모형으로 결정되어 질수 없기 때문이다.⁽²⁷⁾ 노동과 자본의 비교 생산비외에, 비교우위의 서열을 바꾸는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률 이외에 기술 획득과 전파비용, 국내정책의 불일치, 규모의 경제와 산업에서의 불완전경쟁 등이다.

노동과 자본 이외에 기술획득과 투입률 획득과 마아케팅 비용 등을 고려하는 경쟁적 우위가 정통적 비교우위론 보다도,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발달하거나, 발달될 수 있는 산업을 파악하기에 더 적합한 분석도구이다.⁽²⁸⁾ 어떤 나라가 특정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생산비용이 적다면, 경쟁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73년에 한국이 조선공업에서 경쟁 우위를 가졌는가를 알기 위하여, <도표 4-1>에 한국과 일본 조선소의 3가지 종류의 선박에 대한 단위당 생산비용이 나타나 있다. 화학선의 생산비용은 한국의 경우 그때까지 생산한 적이 없기에 나타나 있지 않다. 만일 한국이 화학

<도표 4-1> 1973년의 생산비용의 비교 (단위 : 총톤수당미국 달러)

국 가 종 류	한 국 (A)	일 본	한 국 (B)
Bulk Carrier	361	307	305
Tanker	334	258	257
Chemical Ship	—	348	354

주석 : i) —는 자료가 이용불가능한 경우임.

ii) 자료는 조선공사 실무자와 면담에서 얻었음.

iii) 한국 (A)는 실제 생산비이고, 한국 (B)는 일정한 가정 하에서의 기대되는 비용임.

(27) Harkness, J., "Factor Abundance and Comparative Advantage," *American Economic Review*, 1979, pp. 784-99.

(28) Ohlin, B., et. al. eds., *The International Al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Macmillan, 1977.

선을 견조한다면, 필요한 기술과 기본도형을 배우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에, 단위당 생산비용은 일본에 비하여 높게 되었을 것이다.

〈도표 4-1〉의 실증적 자료들은 한국이 73년에 3가지 종류의 선박을 생산하고 수출하는데 경쟁우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73년까지 한국의 조선소의 비용상승요인으로는 : (i) 수입기자재의 높은가격 ; (ii) 적기에 기자재수입이 되지 않음으로 생산공정의 장기화 ; (iii) 낮은 수준의 기술획득 및 전파 ; 그리고 (iv) 생산과 마아케팅에서의 규모의 불경제를 들수 있다. 〈도표 4-1〉로 부터의 암시는 우리의 조선공업이 73년에 잠재적 경쟁력을 지니지 않았다면 조선공업에 편파적으로 배분된 정책금융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실제의 경쟁력과 반대되는 개념인 잠재적 경쟁력은 요소시장의 불완전과 부(−)의 기술적 외부효과로 말미암아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실제의 생산비용으로 부터 제하여 구한다. 만일 상당한 요소시장의 불완전성과 부(−)의 기술적 외부효과가 특정산업의 잠재적 경쟁력의 실현을 막고 있고, 이러한 불완전성과 외부효과를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쇄하거나, 내부화 할 수 있다면,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정당화 될 수 있다. 잠재적 경쟁력을 사용하는 이유는 요소시장의 불완전성과 부(−)의 외부효과로 말미암은 일시적인 비효율을 고려하는 것이, 어떤 특정산업이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지기에 정부가 육성하기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데 타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조선공업이 잠재적 경쟁력을 실현하는데 두가지 장애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잠재적으로 높은 자금조달 비용과 산업발달 초기에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의 기술적 외부효과이다. 후자의 요인은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의 부(−)의 외부효과를 보상하여주는 동태적인 유치산업 보호론이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요소시장의 불완전성과 부(−)의 외부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최적’ 보조를 산출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잠재적 경쟁력 자체가 우리나라 및 다른나라의 생산성, 기술 및 외환율이 변함에 따라서 달라지고, 특정회사가 보조로 받는 혜택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기에 ‘최적’ 보조를 산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실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73년에 한국의 대략의(proxy) 잠재적 경쟁력을 다음의 가정으로 산출한 것이 〈도표 4-1〉의 (B)이다 : (i) 정부가 규모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만큼의 고정 및 유동차본을 정책 금융으로 지원하고 ; (ii) 기술획득 및 전파를 위한 정책금융의 배분 ; (iii) 조선소에서 생산 활동을 통한 학습효과로 얻는 노동생산성의 증가 ; (iv) 조선소가 적기에 경쟁적 가격으로 부품을 수입하거나, 국내부품산업을 국제부품수준까지 수입대체하고 ; 그리고 (v) 제품주기로 성숙기의 산업이므로, 선진국에서 생산원가의 획기적 절감을 할만한 기술혁신이 없으리

라고 본다.

〈도표 4-1〉의 (B)를 보면 한국은 73년에 화학선을 제외하고는 잠재적 경쟁력을 가졌음을 나타낸다. 무역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은 가격경쟁력 이외에 수출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한국조선공업에 기대되는 순사회수익은 조선공업의 시장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정책수립가들은 73년에 한국은 정(+)의 사회적 수익을 얻을 만큼의 큰 세계시장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1979년 이후에 조선공업의 유휴시설은 세계적으로 심화되었다. 해운회사의 수입은 조선회사의 수요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불황시에는 감소하는 해운운임에 감소하는 화물량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운회사의 수입이 줄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소들은 감가상각비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수출가격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순사회수익이 부(-)가 되므로, 79년 이후의 생산시설 확장을 위해 지원된 정책금융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금융이 조선공업의 국제경쟁력과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순사회수익을 구하고자 한다. 조선공업의 순사회수익은 이윤으로부터 정책금융의 보조금을 빼고, 이것을 순투자총액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 조선공업의 순사회수익을 조선공업의 수출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을 나타내는 SMEER의 비율과 제조업 전체의 순사회수익과 비교하면 시계열로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도표 4-2〉에 나타나 있다. 〈도표 4-2〉는 조선공업의 수출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선공업의 순사회수익이 제조업 전체의 순사회수익보다 적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조선공업에 배분된 정책금융이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73년부터 78년까지 배분된 정책금융은 규모경제를 실현하여 단위당 생산비용을 줄였기에, 유치산업론의 입장에서 정당화

〈도표 4-2〉 편파적인 산업지원과 상대적 순사회수익

- (A)는 조선공업에의 수출과 수입에 대한 SMEER의 비율을 전체 수준의 수출과 수입에 대한 SMEER의 비율로 나눈것임.
(B)는 조선공업에 배분된 정책금융의 순사회수익임.
(C)는 제조업 전체의 고정자산에 대한 순사회수익임.

연 도	(A)	(B)	(C)	연 도	(A)	(B)	(C)
1974	2.82	-10.4	14.6	1979	1.38	-10.5	12.8
1975	1.54	4.4	14.8	1980	1.67	-13.2	-2.1
1976	1.62	-7.6	15.2	1981	1.84	-16.2	11.6
1977	1.47	-7.5	15.0	1982	1.48	-21.6	13.4
1978	1.42	-11.1	14.7				

주석 : i) (A)는 1년의 늦은 시차가 있음.

자료 : 현지조사 및 한국은행의 '기업재무제표'

될 수 있다. 1979년 이후에 배분된 정책금융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유통시설 만을 증가시켰을 뿐이다. 80년부터 82년까지는 증가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선공업의 순 사회수익은 격감하였다. 이 기간동안에 우리의 수출가격은 세계의 일반수준보다 30%를 밀도는 수준으로서 불황가운데 조금의 갑가상작비라도 견지려고 하였다.

다음 장은 조선공업이 왜 이윤지향적이 되지 못하고, 판매에 급급했는가를 분석하고, 시장조사, 제품개발가격책정, 판매망 개척 및 축진에 종합적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VI. 輸出마아케팅의 事例研究

마아케팅이 판매와 다른점은 고객지향적, 이윤지향적 그리고 종합적 노력으로 특징지워진다. 국제마아케팅이 국내마아케팅과 다른점은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환경을 바르게 파악하여,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대하여는 이해를 충분하게 하여, 마아케팅 활동에 도움이 되게 적응하고, 통제 가능한 요소들은 마아케팅 전략에 맞추어 구사하는 것이다.

조선공업에 수출마아케팅 전략이 있었는가, 만일 있었다면 과연 통제불가능한 국제시장의 변화에 따른 방향으로 대응했는가, 그리고 통제가능한 요소들을 마아케팅 전략에 부합되게 구사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국제조선시장의 환경을 조선공업의 특성, 구조, 관련된 산업, 수급의 변화, 경기변동과의 관계 순서로 간단히 살펴 본다.

제품수명주기에 따르면, 조선공업은 성숙한 산업이다. 조선공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요구되는 규모경제의 실현과 관련된 산업의 발달을 전제조건으로 하기에, 60년대 까지는 과정형태의 시장이었다. 대부분의 과정시장과는 달리 조선공업에서는 제품차별화가 심하지 않다. 70년대부터는 규모의 경제가 유일한 진입장애라는 것과 어떤 조선소도 보호된 시장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선국가간의 경쟁은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공업의 상향산업(upstream)은 철강, 해운기술공업과 기계공업이다. 조선공업은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해 왔고, 탱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특수한 형태의 선박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기에, 앞으로도 표준화된 제품보다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건조하게 될 것이다.

조선공업은 전통적으로 많은 상선을 보유한 나라에서 발달했다. 국내수요의 중요성은 1955년 일본이 선박을 대량으로 수출하면서부터 줄어들었다. 조선소간의 경쟁은 해운에서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비례하여 심화되었다.

지난 30년 동안에 수요의 변화경향은 : (i) 단위당 해운운임을 줄이기 위하여 더 큰 선박에 대한 수요의 증가 ; (ii) 컨테이너, 화학선과 다목적겸용선과 같은 구분된 화물의 운송을 위한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요의 증가 ; 그리고 (iii) 전통적 해운국가로 부터, 라이베리아 같은 편리한 국적을 이용하는 상선과 신생 공업국가 상선의 증가이다. 앞의 (i)과 (ii)는 더 이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²⁹⁾, (iii)은 계속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선공업의 공급면에서 1970년대 초부터 가장 중요한 경향은 생산시설 규모의 빠른 확장과, 선진국들로 부터 신생 공업국가들로의 비교우위의 이전이었다. 조선공업의 생산기술에 계속 발전이 있었지만, 생산과정은 조립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조선공업에 쓰이는 기술은 중간의 기술(medium technology)이어서, 몇 개의 후진국들은 어려움없이 조선공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세계조선 수주는 1973년에 최고 이었고, 73년과 79년 석유파동 이후 전통적 조선국가들의 몇 개의 조선소들은 파산하였다. 생산시설의 과잉과 수요의 부족은 조선공업의 반복되는 문제이었고, 조선공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조선공업이 79년 이후에 겪은 불황은 보통의 불황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조선공업의 산출고는 50년부터 75년까지 연 평균 10%로 증가하였으나, 76년부터 80년까지 연 평균 12%로 감소하였다.⁽³⁰⁾

조선공업의 마아케팅 전략에서 중요한 요인은 규모경제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장조사, 제품개발, 가격정책 및 판매조건이다. 규모경제는 조선공업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이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경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몇 개 국가의 조선소들이 과점력을 행사하기에, 규모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최적 규모의 공장이 되게끔 투자해야, 국제경쟁력을 갖게 된다.

높은 고정자본의 비율을 가진 큰 기업은 수요의 변동에 취약하다. 조선공업은 제조업 평균보다 더 심한 경기변동을 하기에, 규모경제를 실현할 계획을 세울 때 미래시장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분석해야 한다. 1979년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산시설의 확충이 요구되지 않았다 : (i) 수직적으로 관련된 산업에서 규모경제를 실현하고, 부품산업부문에서 기술진보를 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 (ii) 시설 확장을 위한 정책금융의 지원은 유

(29) (i)은 더 큰 선박을 건조할 기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무역량이 줄어드는데 적응할 수 있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이다, 큰배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하지 않고, (ii)는 근해 석유개발산업에 관련된 선박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시장세분화를 할만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30) Lloyd's Register of Shipping, *Annual Summary of Merchant Ships Completed in the World*, 1981.

휴시설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 79년 이후에 세계조선공업 및 국제경제 환경에 대한 그릇된 시장조사와 그릇된 개념의 국제경쟁력 향상의 결과 채산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수출 마아케팅전략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러한 마아케팅 전략은 비효율적인 무역 및 산업정책으로 지원되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비용의 변화는 다른 형태의 동태적 규모의 경제이고, 배움의 곡선과 관련되어 있다. 배우는 과정은 기계공업이나 조선공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선공업은 실제공장의 도형에 따라서 비용구조가 결정되는 과정생산산업(process industry)과 달리, 생산하면서 얻는 학습효과를 증가시킴으로써 비용을 감소시키는 생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979년의 주어진 최적 규모하에서는⁽³¹⁾ 시설확장보다는 공장내의 생산으로 부터의 학습효과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규모경제의 실현은 장기의 문제이고, 낮은 조업도는 단기의 문제이다. 73년과 79년의 석유위기는 세계적으로 유휴시설을 증가시켰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생산시설의 확장으로 조업도는 78년에 28%, 79년에 20%, 그리고 80년에는 23%이었다. 79년의 바람직한 정책대안은 기술획득과 전파를 위한 정책금융을 배분함으로써, 생산과정의 특화나 부품산업을 발달시키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한국의 조선공업은 수출이 감소할 때 조업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조선부문으로 생산 및 판매의 다양화를 고려하지 않았고, 80년에 뒤늦게 고려할 때에는 기술의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본은 78년 이후, 비조선부문으로 생산을 다양화함으로써 세계 1위의 조선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³²⁾

1975년에 현대중공업이 완성되자 대형 선박에 대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게 되어, 선박수입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1978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선박수입이 증가된 원인은 한국의 해운회사들이 계획조선으로 한국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선박을 구입하는 것보다, 외국의 중고선을 연불로 구입하는 것이 자금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선박의 수출과 수입은 동시에 평행적으로 증가했다.⁽³³⁾ 만일 국내시장에 대한 계획조선의 자금이 용도와 금리가, 수출에 대한 연불과 같은 조건이었다면, 선박수입은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31) 여기서 최적규모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장기평균비용의 최저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순사회수익이 정(+)이 되는 생산규모를 뜻한다.

(32) 1980년에 한국의 비조선부문에의 특화는 30%가 되지 아니했고, 일본의 경우에는 70%에 달했다.

(33) 총수출액 중 선박수출은 73년에 0.2%로 부터 82년에 12.9%로 증가했고, 총수입액 중 선박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에 1.1%로 부터 4.2%로 증가했다.

국내시장보다 수출을 위한 편파적인 지원은 외국의 왜곡을 상쇄하거나, 국내시장에 비해 많은 이윤을 얻게되면 정당화 될 수 있다. 수출에 대한 연불금융은 전자의 경우에는 정당화 될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연불금융의 역이자⁽³⁴⁾와 79년 이후의 불황의 경우는 국내와 국외판매 사이에 채산성에 차이가 없기에, 하향산업인 해운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기술획득의 시도를 할 경우에는 국내판매가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시장을 위한 계획조선에 의한 금융이 우리같이 차별적인 나라는 많지 않다.⁽³⁵⁾ 79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해외수요와 증가하는 국내수요를 고려하면, 수출과 국내판매 간의 유인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한국의 조선공업의 경쟁력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힘입었다 : (i) 저렴한 노임과 정책금융에 의한 저렴한 자본이 이용가능하고 ; (ii) 75년 일본이 부품산업수출을 쌍값으로 하였고⁽³⁶⁾ ; (iii) 일본조선소의 완전 가동과 유럽조선소의 반복되는 노사분규 때문에, 한국의 조선소는 인도시기에 맞추어 공급하여 좋은 영업권을 확보하고 ; 그리고 (iv) 원화가 미국 달러와 연계되어서, 일본의 엔화와 유럽통화에 대하여 달러가 평가절하됨에 따라서 원화가 같이 절하되어, 국제입찰가격이 싸게 표시되었기 때문이다. 앞의 요인들이 79년 이후 약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향후 20년간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³⁷⁾

80년대 초에 한국의 조선소로 부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마아케팅전략과 관계되는 생산면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i) 독립적인 도면설계와 기술개발능력의 부족 ; (ii) 생산관리 능력 부족으로 일본에 비하여 낮은 생산성 ; (iii) 학습효과로 얻는 기술축적을 저하시키는 높은 이직율⁽³⁸⁾ ; (iv) 급격한 조선소의 확장으로 숙련기술공에 대한 초과수요로 인한 노임의 빠른 상승율 ; 그리고 (v) 수출감소에 따른 수입(revenue)감소를 상쇄 할 비조선부문으로 생산활동의 다양화가 적은 것이었다. 세계시장과 공급면에서의 변화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마아케팅 믹스를 구사하지 못한 경영층의 취약이 각 조선소의 X-inefficiency의 주된 원인이었다.⁽³⁹⁾

(34) 수출입은행은 연불금융자금의 65%를 유로달러시장에서 연이율 12~14%로 빌려와서, 외국구매자에게 연이율 9%로 대여하므로, 국가로 보면 3~5%의 역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1982년 일본은 총수출중 연불수출을 34%로 줄였으나, 우리의 대응되는 비율은 91%로 증가했다.

(35) 1976~82년 사이의 연불금융의 연 이자율 9%이었으나, 계획조선은 연 12%이었고, 계획조선의 자금이용도는 연불의 1/5이었다.

(36) 일본 국내시장보다 7%정도 싸게 팔았음. 한국의 조선소가 수입가격의 3%를 운임과 보험료로 지불하더라도 재료비에서 한국이 가격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음.

(37) Hwang, H.D., *Op. cit.* 참조.

(38) 1980년에는 30%의 노동력이 다른 조선소로 이동했다.

(39) Leibenstein, H., 'Allocative Efficiency versus X-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66.

한국의 조선공업은 73년 이후 처음으로 대량의 수주를 받기 위해 많은 비용을 소요해야 하기에, 유치 마아케팅론에 의한 지원이 정당화 될 수 있다. 70년대에는 대부분의 수주를 중개인을 통해서 받았으나, 80년 이후는 독자적으로 마아케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수출국들도 다변화되었다.

수출 마아케팅에서의 문제점은 생산부문에서와 같이 특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쟁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은 세계 선가가 바닥에 있을 때,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수주를 받은 점이다. 예를 들면, 79년에 설립된 어떤 대형조선소는 국내의 다른 조선소가 이미 세계수준보다 30% 낮춘 가격을, 다시 20%로 낮추어 수주받는 경우도 있었다.⁽⁴⁰⁾

조선공업의 수출마아케팅에서 가장 큰 전략의 변화가 지적되어야 한다면, 조선소들은 수출액을 극대화하기 보다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마아케팅 믹스를 구사할 것이 고려된다 : (i) 장기적인 안목에서 몇 개의 경쟁적 특정품목에의 집중투자 ; (ii) 수출마아케팅을 보조하기 위한 회사내에서의 작업을 통한 학습효과 증진 ; (iii) 실체화되지 않은 기술(disembodied technology) 수준을 고려한 선별적인 기술도입에 의한 부품산업의 육성 ; (iv) 경쟁국들의 생산비용과 마아케팅 전략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마아케팅 전문가의 양성 ; 그리고 (v) 불황기에 조선공업 전체의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출 카르텔의 형성이다.⁽⁴¹⁾

다음 장은 린다의 대표수요이론이 우리의 수출마아케팅 전략에 어떠한 정책암시를 시사하는지, 그리고 신보호주의와 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된 이후, 우리의 무역 및 산업정책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VII. 代表需要理論과 輸出마아케팅戰略

일차상품의 무역에는 요소부존도 이론이 타당하다. 공산품의 교역에도 해서—오린의 요소부존도 이론이 같은 이유로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린다는 국내의 소득수준에 부합되는

(40) 유럽의 설립된 조선소의 선박생산비용은 노무비 25%, 재료비 60%, 관리비, 기타 15%이고, 한국의 경우는 노무비 18%, 재료비 70%, 관리비, 기타가 12%이다. 유럽과 일본의 조선전문가들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조선소는 어떻게 재료비를 15%~20% 밀도는 가격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해 한다고 들었음.

위 계약은 이란과의 12척의 Bulk Carrier 수출 계약 이었음.

(41) 한국으로서 수출카르텔 조직에는 어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조선소들이 세계적으로 제일 싼값으로 수주해 왔기 때문이다.

수요를 ‘대표적 수요’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수요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잠재적 수출을 위한 필요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 (i) 국제무역은 자국내의 경제활동의 연장에 지나지 않고 ; (ii)만일 공산품의 생산이 기술개발에 의존한다면, 국내 수요가 필요하다는 다른 이유가 된다. 대표수요인 상품은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서, 서서히 외국시장으로 수출된다. 린다가 주장하는 논지는 생산함수는 모든나라에서 동일하지 아니하나, 국내수요가 있는 제품의 생산함수가 상대적으로 수출하기에 유리한 생산함수라는 것이다.

린다의 주장에 따르면 제조업의 잠재적 무역은 유사한 수요구조를 가진, 즉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간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⁴³⁾ 대표수요가 존재하지 않을때 수출마아케팅을 하는 경우는 린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 (i)국내수요가 없음에도 외국의 수요가 쉽게 파악되는 경우 ; (ii)이러한 제품의 생산기술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이다.

대표수요의 개념은 잠재적 수출을 범위를 좁히는데 유용할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다른 국가간에 실제 무역의 흐름을 파악하는데도 유용하다. 예를들면, 일본은 자전거가 대표수요일때 자전거를 수출하고, 자동차가 대표수요인 나라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했다. 대표수요이론으로 무역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유리한 점은, 주어진 소득수준에서 어떤 상품이 대표수요가 되기 쉬운가를 결정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단순히 요소부존도에 따라서 상품을 노동집약적 또는 자본집약적으로 구분하여 사전에 어떤 특정상품이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구분하기가 힘들다. 예를들어 한국이 60년대에는 경공업, 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에 비교우위를 가졌다는 요소부존도 분석은 노동과 자본이외에 투입물의 이용가능성, 기술획득비용, 규모의 경제, 산업의 특성과 시장 구조를 분석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만 가지고 현실세계를 분석하기에, 이에 의하여 수립된 무역정책은 그릇된 정책이 될 위험이 크다.

린다는 산업 혁명이 늦게 이루어진 나라가 기술을 배워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수입대체를 위한 보호를 정당하다고 하였다. 린다의 주장은 유치산업론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진입자가 이겨내기 어려운 선진국의 감소하는 비용과 후진국의 배움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이, 선진국들이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갖게되는 기초라는것을 지적했다. 린다는 후진국들이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제품개발 초기에 감수해

(42) 핵서—오린의 요소부존도에 따르면 무역은 소득수준이 상이한 국가끼리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핵서—오린 이론으로는 동일한 지역은 동일한 요소부존도를 가지므로 Inter-regional Trade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Linder는 대표수요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음.

야만 하는 정태적 또는 동태적 규모의 불경제로 인한 높은 비용과 배우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부(−)의 기술적 외부효과의 높은 비용을 극복해야 하기에, 후진국들이 대표수요가 없는 공산품의 수출로 얻게되는 수익은 극히 적다고 하였다. 린다는 수출이나 수입대체 어느쪽도 더 빠른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않기에, 공산품의 성격상 수출상품과 수입대체 상품의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린다는 결론 내리기를 수입대체성장과 수출주도형 성장을 구분하여 어느 한쪽이 낫다는 주장——예를들면 크루이거나 바그와티 같이 일방적으로 수출주도형이 더 나은 경제발전정책이라는 주장——은 위험하다고 하였다.

후진국들은 무역을 할때, 선진국들의 독점적 지위를 고려하여, 대표수요가 있는 제품중에서, 규모경제와 기술개발이 앞선 품목부터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수출해야 한다. 대표수요가 없이 수출부터 하는 경우는 대표수요가 있는 경우에 비하여 더 큰 투자가 요구되고, 실체화되지 않은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게된다. 후진국이 아닌 일본도 대부분의 경우, 국내수요를 먼저 충족시키면서 기술축적과 전파를 하고, 수출마아케팅을 할 때에는 규모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과감한 가격인하를 하여 수출시장을 어느정도 확대하고 나서, 품질의 신뢰도 향상과 사후봉사의 비가격경쟁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생산원가절감을 하여 수출을 통한 이익을 증대해 왔다. 그 결과 일본은 우리에 비하여 산업연관효과와 부가가치가 크다. 일본의 경우 어떤 산업의 수출이 단기적으로 부(−)의 사적순수익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정(+)의 사회적순수익을 가져올 경우, 금융자본이 개발은행의 성격을 지니고 산업자본과 함께 이러한 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했다.⁽⁴³⁾

수입대체 과정이 없이 수출마아케팅을 할 경우에 산업구조가 잠재적 경쟁력에 부합되지 않게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기술변화와 산업구조변경 관계의 측면에서 우리와 일본의 조선공업 마아케팅 전략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의 조선공업은 수입기자재에 크게 의존해 왔다. 1975년의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에 의하면, 조선공업의 수입 유발효과는 0.40914로서, 이에 대응되는 제조업의 0.26620보다 높았다. 부품산업의 발달이 조선공업의 발달을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것은 아니지만, 조선공업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부품산업의 발달이 요구된다. 일본의 조선산업은 양질의 부품을 경쟁적 가격으로 공급한 국내부품산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좋은 예이다.

조선 공업이 경쟁적이 되기 위해서는, 구입하는 부품이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적이어야

(43) 전자산업의 수출이 좋은 예이다. 산업 조정능력에서 일본이 영국보다 크게 앞서는 주된 원인은, 사적수익과 사회적 수익의 괴리가 있을 경우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영국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한다.⁽⁴⁴⁾ 한국은 조선공업의 발달 초기에 엔진까지 포함된 대부분의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호경기가 오게되면, 한국의 조선경쟁국들은 부품을 경쟁적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하려 하지 않을 확율이 높기에, 한국은 선별적으로 부품산업을 발달시켜야 한다.

한국이 일본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선박수출국이라는 사실과 한국이 기자재의 대부분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한다는 사실은 두 나라의 공업화 과정과 국제마아케팅에서 상반된 대조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⁴⁵⁾ 일본은 선박수출로 부터 높은 고용효과, 높은 산업연관효과, 및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반면, 한국은 편파적인 조선산업의 수출지원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고용효과, 낮은 산업연관효과 및 낮은 부가가치를 얻었다.⁽⁴⁶⁾

일본은 국제마아케팅의 결지에서 세계적인 관점 가지고 생산활동을 세계적으로 배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활동에 특화함으로써 회사와 국가의 이익을 동시에 극대화시켰지만, 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특화가 부족하기에, 생산활동의 국제적 배분 개념인 국제마아케팅법주에 속하기에 부적합하고, 채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수출마아케팅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부품산업의 마아케팅에서는 상표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80년대까지 부품회사들이 세계적인 상표를 한 품목도 얻지 못했다. 이는 종합적 노력이 부족한 예가 되고, 최고경영층이 마아케팅의 중요성을 바르게 이해했다고 보기 힘들다.

회사와 정부의 실체화된 기술도입 노력은 건조와 조립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조선산업의 복잡한 부품이나 기술도면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체화 되지 않은 기술의 획득, 축적 및 전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기술은 과학적 관계를 생산을 위해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다. 기술발전에 성공한 소련이나 일본은 외국기술을 수입하여, 핵심적인 기술자가 생산과정에서 실체화되지 않은 기술을 익히고, 발전시키고, 전파시키게 하였다. 한국의 경우와 같이 실체화된 기술을 수입하거나, 기술제휴에 의해서만은 고도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획득하기 어렵다. 고급기술을 독자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결과는 계속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을 국제분업의 과정에서 하게 되고, 이 경우에 한국은 생산활동의 국제적 배분인 국제마아케팅 개념으로 보면 능동적인 면보다는 수동적인 면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4) Shinto, H., "Rise and Fall of Shipbuilding", *Riomar Conference Paper*, 1977.

(45) 1980년대 부품생산액은 한국이 9천만 달리이고, 일본은 약 31억 달러 이었다.

(46) 1975년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에 의하면, 조선공업의 산업연관효과는 1.0064이고, 제조업 전체의 평균은 1.9961이었다.

1973년 이후에 대두된 자원민족주의는 우리가 수입하는 원자재의 가격을 상승하게 하였고, 신보호주의는 우리의 수출시장이 60년대와 같이 증가하기 보다는 선진국들의 비관세장벽과 산업간 무역(Intra-industry trade)의 증대로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수출마아케팅 전략은 수출량 보다는 부가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하고, 원자재수입중 수입대체가 가능한 것부터 수입대체를 해야 한다.

60년대에는 선진국들의 상승하는 노임과 감소되는 자본의 한계효율은 선진국들로 하여금 후진국들 중에서 정치적 안정성이 있고, 노사분규가 없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자유무역의 장점만을 강조하여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선택하게끔 유도하였다. 이러한 정책전환의 이론적 뒷받침으로는 무역자유화, 환율자유화, 금융시장의 발전과 자본자유화를 들 수 있다.

80년대에 와서 불황이 심화되자, New Round에서 신생공업국에 대하여 GSP의 철폐⁽⁴⁷⁾, 비관세장벽의 강화와 선진국끼리의 공산품의 산업간무역의 증대를 추구하고, IMF조건으로 선진국의 사적자본을 보호하고, 후진국들의 환율조정문제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종전과 같이 정책금융으로 지원된 실재적 또는 잠재적 경쟁력이 없는 상품수출을 계속하게 된다면, 우리의 왜곡된 산업구조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가져온다 : (i)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투자의 기간이 길지 않게 수출산업을 바꾸게 되면, 기술축적과 과정인 국제시장에서 이기지 못하는 과정에서 산업조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 (ii)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부터는 실업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앞으로 우리의 수출마아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의 생산 및 마아케팅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은 79년에 조선공업 불황방지 카르텔을 형성하여 생산시설을 82년까지 37% 축소하고, 이에 대응되는 노동력 22%를 다른 부문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공장조업률 감소경향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었다. 그들의 전략은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개발과, 비조선부문으로의 생산활동의 다양화, 그리고 새로운 조선국가에게 부품수출을 늘리기 위해 진입저지 가격(Entry-Barrier Limit Pricing)을 실시하는 것이다. 유럽국가들은 조선공업의 고용을 유지하고, 핵심숙련공의 기술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보조를 계속하면서 호황이 올때까지 한계공급자로 남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은 1인당 보조금은 제조업 가운데 제일 많지만, 조선공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서, 예산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계속 실시되고 있다.

조선공업의 발전에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의 분석을 반영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중요하다. 79년에 한국은 감소하는 수출수요하에서 조업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조정이 필

(47) General System of Preference.

요하였다.

시설확장을 위한 정책금융은 전통적 비교우위론과 정체적 유치산업론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수출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되었다. 이러한 정책금융 배분의 가장 결정적인 과오는 잠재적 경쟁력과 투자에 대한 순사회수익이 시장의 크기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가속도원리가 효율적인 자본재 산업의 확장에 제한을 가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자본재에 대한 순수요는 산출량의 수준보다 산출량의 변화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만일 최종소비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본재 산업이 확장된다면, 이러한 확장은 유휴시설을 초래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자본적 손실을 입게 한다.

VIII. 結論 및 政策暗示

제 3 장은 정책금융이 수출유인책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집계적 수준에서 SMEER의 비율을 사용하여 수입대체에 비하여 수출에 편파적인 무역정책 지원을 했음을 입증했다. 제 4 장은 제조업 전체의 수출에 비하여 조선산업의 수출이 73년 이후에 집중적인 지원을 받았음을 SMEER 비율을 사용하여 보여주고, 잠재적 경쟁력 우위의 개념과 투자에 대한 순사회수익을 사용하여 79년에서 82년 동안에 배분된 정책금융이 비효율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제 5 장은 조선회사들이 79년 이후 세계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여,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비합리적인 마아케팅 전략을 수립하였음을 지적했다. 정부는 무역 및 산업정책을 조선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생산의 합리화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수출량을 늘리기 위하여 시설확장을 위해 정책금융을 지원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마아케팅 전략과 무역 및 산업정책은 조선소로 하여금 유휴시설을 가지게 하여, 채산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제일싼 가격으로 수출하는 마아케팅 믹스가 불가피 하였음을 지적했다.

제 6 장은 만일 우리가 린다의 대표수요이론을 바르게 이해하여 정책에 반영했다면, 우리의 수출마아케팅 전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고찰했다. 한국은 70년대 초부터 대표수요가 없거나, 있어도 국내수요를 만족시키지 아니하고, 수출시장을 목표로 무역 및 산업정책을 수립하여 왔다. 그 결과 한국은 선진국의 규모경제로 부터 감소하는 비용을 국내수요없이 이기기 위해 거액의 투자를 거의 동시에 하였고, 실체화되지 않은 기술의 획득과 전파에 조직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서, 수출로 부터 낮은 부가가치를 얻었음을 지적했다. 짧은기간에 성취할 수 있는 투자재원과 기술획득의 어려움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아서 채

산성을 무시한 수출마아케팅 전략이 실시되었다. 80년대의 신보호주의와 IMF조건이 심화되어가는 불경기에서 기업과 국가의 이익을 동시에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표수요증에서 기술획득과 규모경제의 실현이 용이한 품목을 선정하여 부가가치와 채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수출마아케팅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정책금융은 이러한 산업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실패를 보충하고, 실체화 되지 않은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잠재적으로 큰 국내시장을 확인하기 위한 개별적인 사례연구가 요구된다. 제품개발의 초기에 국내시장은 실험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후에 수출과 함께 규모경제를 실현되게 하여 준다. 국내시장을 무시하고 곧바로 수출을 할 경우의 결합은 실체화된 기술을 수입함에 따라 기술축적과 전파의 불연속적인 발전이다. 국내시장 조건은 소득에 의하여 결정되고, 국내의 기술축적과 전파는 국내시장 조건과 연결을 필요로 한다.

산업별로 경쟁력 향상과 경쟁적 구조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금융의 산업조정정책과 경쟁정책과의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⁴⁸⁾ 정책금융은 산업조정정책의 일부이지만, 장기적으로 공장수준에서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경쟁적여건을 촉진시키지 못했다. 정책금융은 소수의 대기업으로 하여금 관리적 과정을 형성하게 하였다. 관리적 과정은 기업가가 가격정책을 통해 노 얻게되는 슘페터의 과정에 비하여 정부의 행정적 통제에 의하여 형성되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경쟁을 슘페터의 과정보다 오래 제한할 수 있다.

정책수립가들은 한국이 60년대에는 경공업에, 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에, 80년대에는 고도기술산업에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 5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교우위가 다른나라와의 상대적 비용에 따라서, 산업간에, 산업내에서 상이하기에, 이러한 직선적 비교우위론은 그릇되다고 할 수 있다. 공산품을 단순하게 경공업 또는 중화학제품으로 분류하여, 어느 한편에 사전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하기 보다는, 공산품의 예상되는 경쟁우위를 제품차별화와 시장구조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한희영, 국제마아케팅론, 다산출판사, 1987.
- [2] 한희영, 현대마아케팅론, 다산출판사, 1987.

(48) 산업정책은 수평적정책(horizontal scheme)인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과 수직적 정책(vertical scheme)인 산업조정정책(industrial adjustment policy)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정책은 이 두가지 상반된(ambivalent) 정책을 균형있게 설계하여, 국민경제의 효율과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 [3] Colin, G. and Hird, M., *International Marketing*, Croom Helm, London, 1986.
- [4] Bhagwati, J. and Krueger, A., 'Exchange Control, Liberalis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3.
- [5] Corden, W., *Trade Policy and Economic Welfare*,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 [6] Linder, S., *An Essay on Trade and Transformation*, John Wiley and Sons, 1961.
- [7] Meade, J., *The Theory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Trade and Welfare*, Vol. 2, Oxford University Press, 1955.